

국회도서관 납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디지털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Legal Deposit in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South Korea: Focusing on Thesis and Dissertation

이 승 민 (Seungmin Lee)**

목 차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디지털 자료 납본 활성화를 위한 제언 |
| 3. 연구 방법 | 6. 결론 |

초 록

본 연구는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인식 및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학위논문 납본의 저해요인 확인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납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위논문의 납본을 수행하고 있으나, 학위논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나 전담인력 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여러 기관으로의 납본 등 납본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학도서관의 정책, 납본 절차의 중복 및 번거로움, 저작권 동의서 확보의 한계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위논문 납본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위논문이 지닌 사회적, 정보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인 납본법의 제정을 통한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 제도의 강화, 디지털 학위논문의 효율적 보존 방안 마련, 통합된 학위논문 납본 시스템 개발, 석박사학위논문 전문 컬렉션 개발을 통한 국회도서관의 위상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cognition and current status of university libraries related to the legal deposit of thesis and dissertation and investigated the ways to activate legal deposit to National Assembly Library. As a result, most universities conduct legal deposit of thesis and dissertation. However, most librarians face difficulties resulted from the duplication of deposits to many institutions. In the case that the deposits are not made, the main reasons are the university library's policies, duplication and inefficiency of the deposit procedures, and the limitation of obtaining copyright agreements. In order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and to maximize the social and informational values of thesis and dissertation, this research proposed approaches to legal deposit of thesis and dissertation, including strengthening digital deposit 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legal deposit law, preparing the effective ways of preservation, constructing an integrated deposit system, and developing professional collection of thesis and dissertation which can consolidate National Assembly Library.

키워드: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납본, 납본제도, 납본법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sis and Dissertation, Legal Deposit, Legal Deposit System, Legal Deposit Act

* 이 연구는 2019년 국회도서관 지원 연구용역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ableman@cau.ac.kr / ISNI 0000 0004 6418 7521)

논문접수일자: 2019년 10월 24일 최초심사일자: 2019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11월 1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73-93, 2019.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4.073>

1. 서론

한 국가에서 발행되는 출판물은 그 내용이나 형태와는 상관없이 자국의 지적 문화유산이라는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현 세대의 활용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야 하는 사회적, 역사적, 정보적 가치 또한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발행되는 모든 정보자원은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 축적, 보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으로 구입과 기증, 교환, 납본 등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제도로 납본제도(legal deposit system)를 들 수 있다(Rugaas 1990).

전통적으로 납본은 인쇄형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출판방식의 디지털화, 디지털 매체의 다양화, 유통 경로의 네트워크화, 정보접근 및 이용행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형식의 전자출판물을 납본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인쇄물 중심의 납본제도를 개정하여 전자출판물을 납본의 대상에 포함시켜 한 국가의 지적 문화유산을 총체적으로 수집,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노영희 2009).

납본은 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대학에서 생산 및 발행되는 학위논문은 다양한 정보원 가운데에서도 특히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학위논문은 1차 정보원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으며, 현 시대의 학문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학위논문의

납본 역시 다른 출판물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학위논문의 납본에 있어서는 납본을 시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 및 지침이 미비하며, 대학 기관의 학위논문 납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저하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쇄본과 함께 PDF 등 디지털 형태로 학위논문이 발행되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 학위논문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 및 장기적인 보존과 접근을 위한 효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국가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적,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활용에 대한 수요, 문제점, 개선점 등을 분석하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 납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인식 및 실태를 분석하고 학위논문 납본의 저해 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전문 학술정보 제공 기관으로서의 국회도서관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납본제도의 기원 및 의의

납본(legal deposit)은 사전적으로는 “새로 발간한 출판물을 본보기로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로 정의되고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9). 법령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

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납본을 정의할 수 있다(도서관법 제2조(정의) 8호). 이러한 의미를 지닌 납본을 수행하기 위한 납본제도(legal deposit system)는 일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출판물을 생산자로 하여금 지정 도서관이나 유사기관에 각 출판물의 일정 부수를 납본하도록 강요하는 정부 규정”을 의미한다(Jasion 2019). 또한 납본제도에 대해 UNESCO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헌을 여러 부수로 생산하는 상업조직 또는 공공단체와 개인이 공인된 국가기관에 1부 이상을 납본하도록 강요하는 법적 의무”로 정의하고 있다(Larivière and Lunn 2000). 한국도서관협회(2010)에서는 “신간도서를 발행하였을 때 또는 판권을 얻으려 할 때, 법에 의하여 규정된 관청이나 도서관에 도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납본제도를 정의하고 있다. 이들 정의를 종합해 보면, 납본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자료를 발행하고 제작한 때에는 국가기관에 일정한 부수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납본제도는 한 국가의 출판물 및 이에 수록된 지적 자산과 향후 발행될 문화유산 등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재의 도서관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세대의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보존, 전승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British Library 2007; Milne and Tuck 2008; Fleet 2003). 따라서 납본은 한 국가의 문화유산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안전하게 보존함으로써 당대의 이용은 물론 후대에 전달하는 효율적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Council of Europe 2000). 이에 많은 국가에서는 납본 업무를 국가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주요 기능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납본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납본제도는 1537년의 몽펠리에(Montpelier) 칙령을 토대로 프랑스 국왕인 Francois I세가 최초로 납본법을 도입하여 시행한데서 유래되었다. 이후 벨기에(1594년), 영국(1610년), 스웨덴(1661년), 덴마크(1697년), 핀란드(1702년) 등의 국가에서 납본법을 제정해 왔으며(윤희운 2002), 현재 140여 개국에서 공식적으로 납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판된 문헌을 수집,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납본 의무를 강제 조항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UNESCO의 『디지털 유산 보존에 관한 헌장(Charter on the Preservation of Digital Heritage)』 제8조(디지털 유산의 보호)에서는 디지털 유산 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적, 제도적 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존정책의 중요한 요소로서 아카이브 관련 법 및 도서관, 문서보관소, 박물관 등 공공보관소에 제도적, 자발적으로 기증되는 대상 항목 안에 디지털 유산을 포함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납본은 한 국가의 지적 자산으로서의 출판물의 정보적, 사회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따라서 납본의 활성화 및 효율적 시행을 위해 법령상에 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계 각국의 납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 17개의 국가에서는 독립적인 납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도

서관법의 형태로 제정되어 납본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 등 2개 국가이며, 미국과 호주, 중국, 아이슬란드, 멕시코 등 5개 국가는 저작권법으로, 이외 국가에서는 문화재법, 매체법, 연방법 등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윤희운 2014).

2.2 우리나라의 납본 제도

납본과 관련된 정책 및 납본법에 대한 사항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납본제도 또한 다양한 법 규정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납본제도는 조선 말기 일제가 우리나라의 신문을 탄압, 통제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1907년 7월 24일에 공포한 「신문지법(新聞紙法)」으로 알려져 있다.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제1조에서 “신문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관찰사(경무사)를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받음이 가함”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앞서 내부 및 그 관할 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이는 신문을 발행하기에 앞서 내부나 관할 관청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납본 관련법이며, 사전검열을 제도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1909년 2월 23일, 구한말시대의 법률 제6호로 제정·공포된 「출판법」에서도 지방장관(경시총감)을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허가를 받고, “문서와 도화를 출판할 때에는 즉시 제본 2부를 내부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2019). 이를 통해, 출판물의 사전 검열과 사후 납부를 의무화함으로써 출판물의 통제를 철저히 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판 활동 관리와 문화유산으로서의 출판물 보존의 목적이 아니라 출판 허가 및 검열이라는 통제수단으로서 납본이 시행되어 왔다. 이처럼 납본이 검열과 사상규제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 인하여 납본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도서관에 의한 법정 납본제도가 처음으로 규정된 것은 1963년 「도서관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전까지의 출판물 검열과 사상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된 납본제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납본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출판사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협의를 통한 납본 대행을 실시하였다. 해당 법령은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개정되었다가 2006년 다시 「도서관법」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1항에서는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온라인 자료를 제외한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누구라도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위의 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고 명

시함으로써 디지털 파일에 대한 납본을 규정하고 있다.

납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법령으로는 「국회도서관법」을 들 수 있다. 동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7조 제4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그 학위논문이 간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위논문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석박사 학위논문의 인쇄본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납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회도서관에서는 대학의 학위논문 납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학위논문의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도서관은 학위논문 총목록을 간행하는 등의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다.

2.3 국내의 학위논문 납본 상황

납본의 대상 중 대학에서 생산 및 발행되는 학위논문은 1차 정보원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으며, 현 시대의 학문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학위논문의 납본 역시 다른 출판물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위논문은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

정을 이수한 대학원생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작성하고, 대학 및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제출하는 논문을 의미한다. 학위논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가 수행되며, 해당 연구 분야의 명망 있는 다수의 심사 위원들로부터 연구내용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준되고 있다. 또한 학위논문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주제에 대해 작성되며, 표절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제반 시스템과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인준이 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위논문은 학회지의 학술논문이나 기술보고서 등에 비해 보다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학위논문은 이론적 배경과 함께 광범위한 참고문헌과 인용정보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선행연구 조사 시 신뢰성 있는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학위논문의 고유한 가치로 인해 납본의 대상에 학위논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국가적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학위논문 중 특히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특정 연구 분야의 전문성과 독창성이 요구되므로, 학위수여기관인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석박사 학위논문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학위논문이 갖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 지식자원의 일부로 간주하여 인쇄본에 대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인 수집과 디지털 학위논문의 납본 및 보존을 위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rea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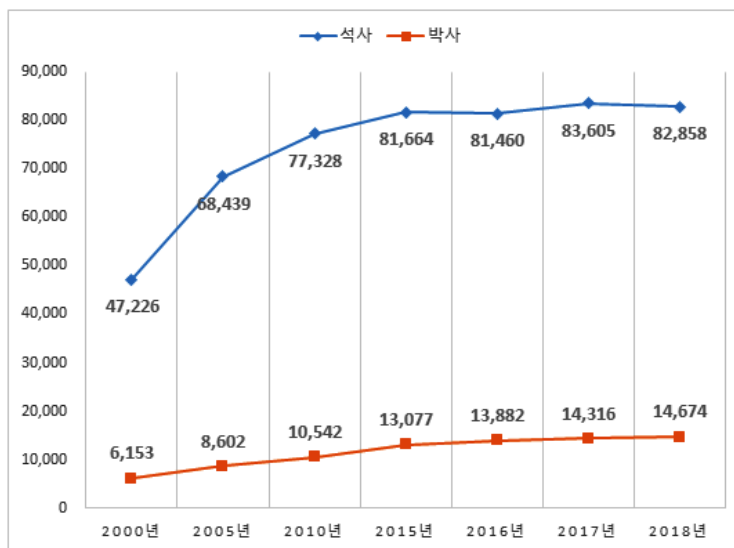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등이 주관이 되어 국내 대학에서 생성하는 석박사 학위논문을 수집하고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학위논문의 납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2015년까지 국내 석박사 학위취득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2018년도에 14,674명으로 2000년 대비 8,52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교육통계센터 2019).

이와 같이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학술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은 수집과 정리의 측면에서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접근과 이용에도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학위논문은 학술정보의 잠재적 가치 측면에서 대학의 동결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이나 기관의 연구 집단이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윤희운 2004).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현재 학위논문의 납본은 납본을 시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 및 지침이 미비하며, 대학 기관의 학위논문 납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저하 등으로 효율적인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학위논문은 논문 공표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누락 없이 완전무결한 수집이 어려웠으며, 그러한 의미로 회색문헌의 범주에 학위논문을 분류하여 취급해 왔다. 또한 발행 시기가 동일하고, 발행 부수가 한정적이었으므로 각 대학들은 대학에서 생산된 학위논문의 기증과 수증을 통한 교환을 통해 타 대학의 학위논문 인쇄본을 자관에서 수집 및 관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의 학위논문에 대한 대학 간 교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화



〈그림 1〉 2000년 이후 국내 석박사 학위취득자 현황

된 학위논문은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을 통해 수집되고 있다. 또한 KERIS의 dCollection을 통해서도 수집, 배포, 이용되고 있어 전통적인 학위논문의 수집, 배포, 관리와는 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으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를 분석한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의 원인을 분석, 실증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위논문, 특히 디지털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현장의 한계 및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학위논문의 납본, 수집, 제공에 있어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의 납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위논문 납본의 현황 및 납본 시행에 있어서의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학위논문 납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학위논문 납본 활성화 방안을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학도서관과 사립대학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학위논문, 특히 디지털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납본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국공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소속 회원교 중 2017년 대학정보공시를 참조하여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239개 대학이며, 구조화된 설문항목을 온라인 설문지로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239개 대상 기관 중 총 156개 기관(65.27%)이 응답하였고,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일관성 없는 응답이 발생한 9개 기관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47개 기관을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3.2 설문항목 구성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항목은 총 6개 영역, 20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분석 대상인 147개 설문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소속기관을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대학도서관 소속이 113명(76.9%), 국공립대학도서관 소속이 23명(23.1%)으로 나타났다. 대상 기관 소재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60명(4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상권 42명(28.6%), 전라권 21명(14.3%), 충청권 20명(13.6%), 강원권 4명(2.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소속기관 규모는 '대규모'가 85명(57.8%)으로 가장 많고, '중규모' 37명(25.2%), '소규모' 25명(17.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근무경력 은 '20년 이상'의 고경력자가 60명(40.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41명(27.9%), '5년 이상-10년 미만' 25명(17.0%),

〈표 1〉 설문항목 구성

영역	문항	질문유형
소속기관 및 응답자특성	응답자 소속기관 특성(설립유형, 소재지, 규모)	폐쇄형(단일)
	응답자 개인적 특성(근무기간)	폐쇄형(단일)
디지털 자료 생산 및 납본 현황	대학 생산 디지털 자료 유형	폐쇄형(복수)
	대학 생산 디지털 자료 관리방법	폐쇄형(단일)
	대학 생산 디지털 자료 관리주체	폐쇄형(복수)
	대학 생산 디지털 자료 납본 여부	폐쇄형(단일)
	대학 생산 디지털 자료 납본처	폐쇄형(복수)
학위논문 전담부서 및 디지털화 방법	학위논문 전담부서 여부	폐쇄형(단일)
	학위논문 디지털화 방법	폐쇄형(복수)
학위논문 디지털 자료 납본 현황	학위논문 디지털 자료 외부기관 납본 여부	폐쇄형(단일)
	외부기관 미납본 시, 사유	개방형
	학위논문 디지털 자료 납본 기관	폐쇄형(복수)
학위논문 디지털 자료 국회도서관 납본 현황	학위논문 디지털 자료 국회도서관 미납본 시, 사유	폐쇄형(우선순위)
	국회도서관 디지털 파일 제공 방법 변경 시, 납본 의향	폐쇄형(단일)
학위논문 디지털화 처리과정 및 관리를 위한 실무자 의향	학위논문 디지털화 과정의 애로사항	폐쇄형(우선순위)
	학위논문 디지털 자료에 대한 국가주도적 관리, 보존, 서비스에 대한 의향	폐쇄형(리커트)
	학위논문 디지털 자료 국가도서관 관리 시, 납본 정책 참여 여부	폐쇄형(리커트)
	학위논문 디지털 자료 통합 관리 기관	폐쇄형(우선순위)
	학위논문 디지털 납본 의무시, 법적·제도적 포함 사항	개방형
	대학생산 디지털 자료의 통합관리 및 장기보존을 위한 개선점 및 요구사항	개방형

〈표 2〉 설문응답자의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대학설립유형	국공립대학	34 23.1%
	사립대학	113 76.9%
대학 소재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60 40.8%
	충청권	20 13.6%
	전라권	21 14.3%
	경상권	42 28.6%
	강원권	4 2.7%
	제주권	0 0.0%
대학 규모	대(재학생 10,000명 이상)	85 57.8%
	중(재학생 5,000~10,000명)	37 25.2%
	소(재학생 5,000명 미만)	25 17.0%
근무 기간	3년 이내	8 5.4%
	3년 이상 - 5년 미만	13 8.8%
	5년 이상 - 10년 미만	25 17.0%
	10년 이상 - 20년 미만	41 27.9%
	20년 이상	60 40.8%
합 계	147	100.0%

‘3년 이상-5년 미만’ 13명(8.8%), ‘3년 이내’ 8명(5.4%)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고경력자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분석 결과

4.1 대학의 디지털 자료 생산 현황

학위논문의 납본 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대학에서 생산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의 유형을 복수응답형으로 조사하였다. 복수응답형 문항의 응답 비율은 응답 건수와 응답자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3〉 참조).

응답건수를 기준으로 대학에서 생산한 디지털 자료의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학위논문이 54.9%(N=14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간행물(20.8%, N=55), 멀티미디어자료(8.0%, N=21), 보고서(7.2%, N=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유형에는 고서, 고문헌, 학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대학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98.6%(N=145)가 학위논

문의 디지털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위논문의 디지털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지, 잡지 등 대학간행물의 디지털 자료 생산 비율(37.4%, N=55)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 해서 보면, 디지털 자료의 납본정책은 생산률이 높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수립하고, 대학의 학문적 특성이 반영된 디지털 간행물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 전체를 분석한 내용이며, 대학 규모에 따라서는 현황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학이 생산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의 유형을 대학의 규모별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규모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위논문에 대한 디지털 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규모 대학에서는 98.8%(N=84)에 달하는 대학이 디지털 학위논문을 생산하고 있었고, 중규모 대학은 100%(N=37)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소규모 대학 또한 96%(N=24)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학간행물의 경우 소규모 대학 중 52%(N=13)의 대학에서 디지털 자료를

〈표 3〉 대학 생산 디지털 자료의 유형(복수응답)

구분	빈도(N)	비율	
		응답수 기준(N=472)	응답자수 기준(N=147)
대학간행물	55	20.8%	37.4%
학위논문	145	54.9%	98.6%
보고서	19	7.2%	12.9%
단행본(전자책)	16	6.1%	10.9%
멀티미디어자료	21	8.0%	14.3%
기타	8	3.0%	5.4%

〈표 4〉 대학 생산 디지털 자료 유형(대학규모별) (복수응답)

구분	대규모(N=85)		중규모(N=37)		소규모(N=25)	
	빈도(N)	비율 (응답자수 기준)	빈도(N)	비율 (응답자수 기준)	빈도(N)	비율 (응답자수 기준)
간행물	30	35.3%	12	32.4%	13	52.0%
학위논문	84	98.8%	37	100.0%	24	96.0%
보고서	12	14.1%	2	5.4%	5	20.0%
단행본(전자책)	12	14.1%	2	5.4%	2	8.0%
멀티미디어자료	13	15.3%	4	10.8%	4	16.0%
기타	6	7.1%	1	2.7%	1	4.0%

생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규모와 중규모 대학은 각각 35.3%(N=30)와 32.4%(N=12)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대학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은 대부분 학위논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따라서 생산하는 자료의 관리나 납본에 있어서도 학위논문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4.2 학위논문 전담부서 및 인력 현황

대학이 생산하는 디지털 자료 중 생산 비율과 납본율이 가장 높은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학위논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및 인력의 배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는 대학의 학위논문 납본 운영 현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납본의

효율성을 확인하는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학위논문 전담부서 및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위논문 업무와 관련해서는 '전담부서 및 인력 없음'이 72.1%(N=106)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위논문과 관련된 업무는 상시적인 검색 및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외하고 입수, 정리, 디지털화, 납본 등은 연 2회, 학기 말이라는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업무이므로 상시적인 전담부서 또는 인력을 두지 않고, 해당 시기에 타 업무와 병행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위논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및 인력 배치여부를 대학의 설립유형별로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 학위논문 전담부서(전담인력) 배치 여부

구분	빈도(N)	비율
학위논문 전담부서 있음	11	7.5%
전담부서 없지만, 전담인력 있음	29	19.7%
전담부서 및 인력 없음	106	72.1%
기타	1	0.7%
합 계	147	100.0%

〈표 6〉 학위논문 전담부서(전담인력) 배치 여부(대학특성별)

구분		전담부서 있음	전담인력 있음	타업무와 병행 수행	기타	계	
설립 유형	국공립	빈도(N)	6	5	22	1	34
		비율	17.6%	14.7%	64.7%	2.9%	100.0%
	사립	빈도(N)	5	24	84	0	113
		비율	4.4%	21.2%	74.3%	0.0%	100.0%
대학 규모	대규모	빈도(N)	9	16	60	0	85
		비율	10.6%	18.8%	70.6%	0.0%	100.0%
	중규모	빈도(N)	2	5	29	1	37
		비율	5.4%	13.5%	78.4%	2.7%	100.0%
	소규모	빈도(N)	0	8	17	0	25
		비율	.0%	32.0%	68.0%	0.0%	100.0%
전체	빈도(N)	11	29	106	1	147	
	비율	7.5%	19.7%	72.1%	0.7%	100.0%	

학위논문을 관리하는 전담부서 설치는 국공립 대학이 17.6%(N=6)로 사립대학(4.4%, N=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담부서는 없지만 전담인력이 배치된 경우는 사립대학이 21.2%(N=24)로 국공립대학(14.7%, N=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두 집단 모두 전담부서 및 인력 없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각각 64.7%(N=22), 74.3%(N=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규모별로는 전담부서 설치 대학이 대규모 10.6%(N=9), 중규모가 5.4%(N=2)로 나타났다. 소규모는 전담부서를 설치한 대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 배치는 소규모가 32.0%(N=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규모(18.8%, N=16), 중규모(13.5%, N=5) 순으로 분석되었다. 전담인력 없이 다른 업무와 병행 수행하는 경우는 중규모가 7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규모(70.6%), 소규모(68.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대학의 특성과 관계없이

학위논문 업무는 대체로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학의 규모가 클수록 전담부서 설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3 학위논문 디지털화 방법

현재 학위논문은 인쇄형태와 함께 디지털 형태로도 관리 및 제공되고 있으며, 학위논문의 납본에 있어서도 인쇄본과 디지털 형태 모두를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학에서 생산되는 학위논문을 어떠한 방법으로 디지털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이의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학위논문의 디지털화 방법을 응답자수 기준 비율로 살펴보면, 'KERIS dCollection'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며(96.6%, N=142), 다음으로 '도서관 자체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16.3%, N=24). 즉, 대학에서는 학위논문 디지털화를 주로 단

〈표 7〉 학위논문 디지털화 및 관리 방법(복수응답)

구분	빈도(N)	비율	
		응답수 기준(N=178)	응답자수 기준(N=147)
도서관 자체시스템	24	13.5%	16.3%
dCollection	142	79.8%	96.6%
대학 리포지터리	7	3.9%	4.8%
외부시스템	1	0.6%	0.7%
디지털화하지 않음	2	1.1%	1.4%
기타	2	1.1%	1.4%
합 계	178	100.0%	-

일화된 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위논문을 디지털화하지 않는 경우는 2개 기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학위논문 디지털화 및 관리를 위하여 응답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개방형 문항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dCollection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의견이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집중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dCollection을 이

용한 학위논문 디지털화가 지니는 장점이 많이 제시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기존 시스템 이용의 편리성과 신뢰성, 시스템 운영을 위한 비용 절감, 내·외부 시스템 연계 용이, 원문 변환, 업로드 및 저작권 등의 등 디지털화 절차의 편의성, 사용자 요구의 지속적 반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편리성, 편의성으로 인해, 각 대학에서는 국회도서관을 포함한 국가도서관에 대한 납본보다는 dCollection을 통해 납본하는 것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학위논문 디지털화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별 활용 이유

도서관 자체시스템 활용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자체의 지식자원으로 활용 •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관리 차원 • 도서관 자체 시스템에 디지털화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학위논문을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음
KERIS dCollection 활용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록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고, 참여기관이 많음 • RISS 자동연계 기능, DRM 변환 가능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관리자 사이트 및 통계 활용이 용이 • 도서관 시스템과 연계서비스 용이 • 학위논문 저작권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고 원문에 대한 링크를 대학의 검색시스템에 연계 가능 • 도서관 자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원 및 인력 부족 •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 • dCollection과 RISS의 직접 연계를 통한 학업 및 연구지원에서의 효율성 확보 • 시스템 운영 비용이 없고, 대학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기능 개선에 반영 • 이용자 대부분이 RISS 이용이 익숙하여 별도의 홍보 없이 이용이 가능 • 저작권 동의를 거친 학위논문에 대해 자유로운 접근과 열람이 가능

4.4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 현황

디지털화된 학위논문은 대학에서 학술서비스를 위해 제공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학위논문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각 대학에서 디지털 형태의 학위논문을 납본하고 있는 현황을 실제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때 납본의 범위는 원문파일의 직접 제공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 하는 형태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표 9〉 참조).

분석 결과, 전체 응답 기관 중 92.5%(N=136)가 납본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납본제도의 시행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현재 학위논문의 납본처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따라서 각 기관별로 납본이 시행되는 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디지털 형태의 학위논문을 납본하고 있는 경우 어느 기관에 납본하고 있는지에 대해 복수응답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10〉 참조).

디지털 학위논문의 납본처를 응답자수 기준 비

율로 살펴보면, KERIS가 86.0%(N=1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회도서관(71.3%, N=97), 국립중앙도서관(69.9%, N=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납본기관 가운데 국회도서관에 납본하지 않는 경우, 미납본 사유를 우선순위형 문항으로 조사하였으며, 이의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상기 우선순위 문항을 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1순위는 응답 빈도의 3배, 2순위는 응답 빈도의 2배, 3순위는 응답 빈도의 1배 가중치를 부여한 후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회도서관에 대한 학위논문 미납본 사유는 ‘소속 도서관의 정책’이 6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납본 절차 및 방법의 번거로움(44점)’, ‘소속단체 결정 준수(43점)’, ‘저작권 동의서 확보의 어려움(3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타 의견으로는 ‘납본 중복 문제(dCollection과 국가도서관)’가 6건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이외에 ‘관련 국가기관 정

〈표 9〉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 납본 여부

구분	빈도(N)	비율
납본함	136	92.5%
납본하지 않음	11	7.5%
합 계	147	100.0%

〈표 10〉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 납본처(복수응답)

구분	빈도(N)	비율	
		응답수 기준(N=310)	응답자수 기준(N=136)
국립중앙도서관	95	30.6%	69.9%
국회도서관	97	31.3%	71.3%
KERIS(dCollection 포함)	117	37.7%	86.0%
기타	1	0.3%	0.7%

〈표 11〉 학위논문 미납본 사유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점수	종합 순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도서관 정책	18	36.0%	7	17.1%	1	2.6%	69	1
소속단체(협회, 협의회 등)의 결정 준수(단독 행동 불가)	8	16.0%	6	14.6%	7	18.4%	43	3
납본 불이행에 따른 처벌 조항 부재	0	0.0%	3	7.3%	8	21.1%	14	7
저작권 동의서 확보의 어려움	6	12.0%	9	22.0%	3	7.9%	39	4
납본 절차 및 방법의 번거로움	4	8.0%	11	26.8%	10	26.3%	44	2
인력 부족	5	10.0%	3	7.3%	7	18.4%	28	6
기타	9	18.0%	2	4.9%	2	5.3%	33	5
합 계	50	100.0%	41	100.0%	38	100.0%		

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국회도서관 원문 이용의 불편함', '국회도서관의 납본 도서관 우대 정책 부재', '학위논문 저작권 위반 문제', '납본 시스템 부재'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들 의견은 크게 대학 기관의 정책, 저작권 확보의 어려움, 납본 절차의 중복 혹은 비효율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현장의 납본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납본 절차의 비효율성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국회도서관에 학위논문을 납본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원문 파일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업로드 시스템(dCollection 등)과 연계할 경우 납본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68.0%(N=34)가 납본 의사가 있었으며, 여전히 납본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2.0%(N=16)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이는 결국 학위논문의 디지털화를 통한 납본에 있어서 여러 기관에 별도로 납본을 해야 하는 중복업무의 비효율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원문의 연계와 같이 디지털 방식의 장점을 확보하는 것이 납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의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위논문의 납본, 특히 국회도서관에 대한 납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측면도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직면하는 실무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학위논문 납본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 납본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개방형으로 조사하였다(〈표 13〉 참조).

이를 종합해 보면, 납본 중복 업무의 최소화 방안이 지배적이어서, 납본의 효율성 저하의

〈표 12〉 학위논문 원문 연계방식으로 변환 시, 국회도서관 납본 의사

구분	빈도(N)	비율(%)
납본함	34	68.0
납본하지 않음	16	32.0
합 계	50	100.0

〈표 13〉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 납본의 효율적 방안 제안

- 국가적 차원의 특정 기관의 주도적 통합관리와 데이터 공유를 통한 중복적 업무 최소화
 - 현행 dCollection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는 해당 정보를 공유
 - 현재의 시스템의 업무 로드 최소화 방안 강구 필요
 - 사서의 데이터 검증 등에 소요되는 업무량이 상당하므로 제출 검증 절차 간소화
 - 전국 대학도서관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파일 제출 양식이 제공되는 시스템이 필요
 - 통합관리 뿐만 아니라 OAK 시스템, 국가 학술정보 클라우드 사업, 연구재단 등과의 시스템적 연계 필요
- 디지털 학위논문 관리의 효율화
 - 대학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디지털 파일의 관리 권한과 책임은 개별 대학(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정책과 지원에 대한 부분은 통합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식
 - 통합관리기관에서 저자와 직접 연계 필요
 - 전담인력과 부서의 설치와 함께 충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 효과적 데이터 변환을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 마련
- 저작권 동의 등과 같은 저작권 관련 장애 제거
 -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 마련
 - 법제화, 법제도의 강제성 부여
-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 학위논문에 최적화된 방안 마련
 - 디지털 학위논문에 대한 다양한 접근점 제공 필요
 - 디지털 학위논문의 형태나 양식의 상이성이 존재
 - 서비스 측면뿐만 아니라 자료의 보존 및 추후 활용 가능성을 고려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 KERIS로 분산되어 있는 납본 방식의 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지배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가적 수준에서의 리포지터리를 통한 학위논문 납본 및 통합적인 관리 운영이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현장 업무에서 저작권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법제도의 강제성 부여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납본 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실제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5. 디지털 자료 납본 활성화를 위한 제안

지금까지 살펴본 각국의 납본법과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에 대한 조사 분석, 그리고 대학도

서관 학위논문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납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5.1 납본법 제정 및 디지털 자료 납본 제도 강화

디지털 학위논문의 납본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독립적인 납본법의 제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와 제20조 2항(온라인자료의 수집), 제45조 제2항 제3호(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도서관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그리고 「국회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등에 납본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납본법을 별도로 규정하

여 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도서관법」과 「도서관시행령」의 조항 등을 수정, 보완하여 독립적인 납본법으로 제정한다면 법적 강제성이 강화되어 개별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납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독립적인 납본법에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학위논문 납본의 목적 및 디지털 형태의 학위논문 납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학위논문에 대한 납본의 경우, 회색문헌 중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학위논문에 대한 납본의 목적과 납본에 대한 상세사항, 즉 납본처, 디지털 파일 납본 시기와 형태, 이용 범위(서비스 범위, 저작권 동의, 이용제한 등), 납본에 따른 보상 및 제재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디지털 형태의 학위논문의 경우 현재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1항과 「국회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제1항으로 납본이 이분화되어 있어, 일선 대학에서 업무에 대한 혼란과 중복적 업무 발생 등 납본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통합법으로서의 납본법 제정이 매우 필요하며, 이를 통한 법적 체계성과 납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형태의 학위논문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국가적 차원의 납본 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해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사서들의 업무를 대폭 줄이고, 1회의 납본만으로 다수의 법정 납본도서관들에게 납본 처리가 되는 형태의 방안이 별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5.2 학위논문 디지털 자료 보존과 아카이빙 강화 방안

학위논문은 한 국가의 지적 유산의 하나이며, 특히 디지털 학위논문은 디지털 유산의 주요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학위논문은 영속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유산이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의 결과로 축적되는 디지털 문헌의 장기보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디지털 학위논문을 수집, 보존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도서관이 필요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보존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적 보존 프로젝트가 시행되어야 하며, 수집해야 할 디지털 학위논문의 정보의 양과 종류, 보존 방법, 보존기간,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등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학위논문을 수집, 보존하여 개별 대학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현재 또는 미래의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디지털 파일 아카이빙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도서관의 위상을 확립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5.3 디지털 학위논문 통합 납본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학위논문 납본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데이터 공유를 통한 중복 업무의 최소화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은 국가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등에 납본

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사서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업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납본을 위해 디지털 학위논문의 형식 표준화와 납본시스템 개발 및 운영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대학은 주로 dCollection을 활용하여 학위논문을 디지털화하는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법정 납본을 준수해야 한다. 대학도서관 측면에서는 동일 자료에 대한 중복 납본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 증가와 도서관 내 인력 부족, 업무적 혼란 등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이에 통합된 형태의 납본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학위논문의 납본처가 복수기관임을 감안할 때, 납본시스템은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납본된 자료는 단일화된 플랫폼을 통해 공유 및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학위논문의 수집, 관리, 보존, 서비스 등에 대한 표준화 및 표준 메타데이터의 확보,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석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국내 대부분 대학에서 매년 2월과 8월, 연 2회에 걸쳐 특정한 시기에 발행되며, 대학 및 대학도서관에서 학위논문에 대한 업무 처리 발생일 또한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납본시스템이 개발된다면 개별 대학도서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5.4 국회도서관 박사 학위논문 전문 컬렉션 개발 국회도서관에 대한 학위논문 납본 활성화 방

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도서관에서 학위논문 전문 컬렉션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국회도서관은 학위논문의 학술적, 정보적, 사회적 가치를 인지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수행해 왔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와 현재 구축되어 있는 디지털 학위논문을 고도화하여, 학위논문 전문 컬렉션을 개발하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가도서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의 위상 강화뿐만 아니라 개별 대학도서관이 국회도서관에 대해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을 수행하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위논문 전문 컬렉션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오픈 액세스 형태로 구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에서도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에 국회도서관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구자의 연구지원을 위해 학위논문의 경우 주제 분야에 대한 상세한 분류가 필요하며, 학문분야의 주제별 구분자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학위논문의 의미를 제고하고 납본에 참여하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자료, 특히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의 인식 및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국회

도서관 학위논문의 활용에 대한 수요, 문제점, 개선점 등을 분석하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 납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학위논문, 특히 디지털 학위논문의 납본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독립적 납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여러 국가에서 납본법을 별도로 규정하여 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현재의 「도서관법」과 「도서관시행령」의 조항 등을 발췌, 수정, 보완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납본법으로 제정한다면 법적 강제성이 강화되어 개별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납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납본법의 별도 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기존의 「도서관법」 제20조 제2항(온라인자료의 수집)과 「도서관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인쇄형태뿐만 아니라 디지털 형태의 학위논문자료에 대한 납본 규정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학위논문의 보존과 아카이빙 강화 방안이다.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서관은 디지털 학위논문의 납본 결과로 축적되는 디지털 문헌의 장기보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학위논문을 수집, 보존하기 위해 개별 대학도서관이 필요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보존하는 분산된 방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학위논문의 보존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수집해야 할 디지털 학위논문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학위논문 납본과 관련하여 사서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그리고 KERIS에 이르기까지 삼원화되어 있는 인쇄형

태 및 디지털 형태 학위논문의 납본에 대한 업무 이중 및 중복 업무의 최소화 방안 마련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납본 개선사항이다. 따라서 사서들의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업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납본을 위해 디지털 학위논문의 형식 표준화와 납본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학위논문의 수집, 관리, 보존, 서비스 등에 대한 표준화 및 표준 메타데이터의 확보, 시스템 구축 또한 고려해야 한다.

넷째, 국회도서관에서 고도화된 학위논문 전문 컬렉션을 개발 및 서비스 하는 방안이다. 전통적으로 학위논문은 논문 공표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누락 없는 완전무결한 수집이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 학위논문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전문 컬렉션을 개발하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가도서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의 위상 강화 및 개별 대학도서관의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학위논문의 납본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며, 납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보다 면밀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의 보완을 통해 대학의 납본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자료 보존 및 관리, 다양한 접근점 제공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의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디지털 자료의 납본 활성화를 통해, 국가 자산으로써의 학위논문의 안정적인 보존 및 활용체계를 마련하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위논문, 특히 디지털 학위논문의 납본에 대한 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 및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의 다른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학위논문의 납본 활성화 및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이 논의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국가교육통계센터. 2019. 『교육통계서비스』. [online] [cited 2019. 7. 19.]
 <https://kess.kedi.re.kr/kessTheme/zipyo?itemCode=03&uppCd1=030202&menuId=m_02_03_01>
- [2] 국립국어원. 201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online] [cited 2019. 11. 13.]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 [3] 국립중앙도서관. 2019. 법과 검열.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창간호. [online] [cited 2019. 7. 1.]
 <http://nlcollection.nl.go.kr/front/detail/detail2.do?recKey=CO0000232489&categoryId=CA0000000023&chkApp=&sub_class=&categoryName=&conRows=&conStart=&pageNo=1&perPage=undefined&flgBack=n>
- [4] 노영희. 2009. 국내의 국가도서관 납본절차 분석을 통한 납본업무의 합리적 운영방안 도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173-189.
- [5] 윤희윤. 2002. 국내의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2): 185-208.
- [6] 윤희윤. 2004. 국내 학위논문의 표준관리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지』, 21(3): 99-123.
- [7] 윤희윤. 2014. 국가도서관 장서개발부서의 분석 및 역량강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1-20.
- [8] 한국도서관협회. 2010.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신문지법. [online] [cited 2019. 7. 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0196&cid=46668&categoryId=46668>>
- [10] British Library. 2007. Code of practice for the voluntary deposit of non-print publications, section 2. [online] [cited 2019. 7. 18.]
 <<https://www.nfer.ac.uk/publications/online-resources/lapublishing/2.5.htm>>
- [11] Council of Europe. 2000. *Council of EUROPE/EBLIDA Guidelines on Library Legislation*

- and Policy in Europe*. Strasbourg: The Committee.
- [12] Fleet, C. 2003. The legal deposit of digital spatial data in the United Kingdom. *LIBER Quarterly*, 13(1): 28-38.
- [13] Jasion, J. T. 2019. *The international guide to legal deposit*. Aldershot, Hants, England: Brookfield, VT.
- [14] Larivière, J. and Lunn, J. 2000.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legislation*. Paris: UNESCO.
- [15] Milne, R. and Tuck, J. 2008. Implementing eLegal Deposit: A British Library Perspective. *Ariadne*, 57. [online] [accessed 2019. 6. 13.]
<<http://www.ariadne.ac.uk/issue57/milne-tuck/>>
- [16] Rugaas, B. 1990. Developing a new national library in Norway. *Alexandria*, 2(1): 41-49.
- [17] UNESCO. 2019. Charter on the preservation of digital heritage. [online] [cited 2019. 6. 20.]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7721&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orea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2019. *Services for Education Statistics*. [online] [cited 2019. 7. 19.]
<https://kess.kedi.re.kr/kessTheme/zipyo?itemCode=03&uppCd1=030202&menuId=m_02_03_01>
- [2]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9. *Dictionary of Standardized Korean*. [online] [cited 2019. 11. 13.]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 [3]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9. Law and censorship. *National Library of Korea digital collection*, First Issue. [online] [cited 2019. 7. 1.]
<http://nlcollection.nl.go.kr/front/detail/detail2.do?recKey=CO0000232489&categoryId=C A0000000023&chkApp=&sub_class=&categoryName=&conRows=&conStart=&pageNo=1&perPage=undefined&flgBack=n>
- [4] Noh, Younghee. 2009. Suggesting the reasonable legal deposit operating plan through analyzing the legal deposit process of national libraries of the worl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4): 173-189.
- [5] Yoon, Hee-Yoon. 2002.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deposit system for electronic public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2): 185-208.

- [6] Yoon, Hee-Yoon. 2004. A study on developing the standardized management model of electronic theses and dissertation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1(3): 99-123.
- [7] Yoon, Hee-Yoon. 2014. An analysis and empowerment of collection development department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1-20.
- [8]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The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9]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9.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online] [cited 2019. 7. 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0196&cid=46668&categoryId=46668>>

